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사회탐구영역 **정치와 법** 정답 및 해설

01. ⑤ 02. ① 03. ③ 04. ① 05. ⑤ 06. ③ 07. ② 08. ② 09. ④ 10. ④
11. ② 12. ① 13. ④ 14. ② 15. ⑤ 16. ⑤ 17. ③ 18. ③ 19. ⑤ 20. ④

1.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 이해

정답 해설: 정치를 바라보는 갑의 관점은 좁은 의미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 을의 관점은 넓은 의미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이다. ⑤ 좁은 의미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과 넓은 의미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은 모두 정년 연장 관련 국회의 법률안 의결 과정을 정치라고 본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 ① 좁은 의미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은 정치를 국가만의 고유한 현상으로 본다. 따라서 국가와 국가 이외 사회 집단의 정치 현상은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본다.
- ② 넓은 의미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은 국가 형성 이전의 정치 현상을 설명하기에 적합하다.
- ③ 좁은 의미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은 정치 활동을 소수 통치 엘리트들의 전유물로 인식한다.
- ④ 좁은 의미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에 비해 넓은 의미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은 사회적 갈등 해결 과정에 참여하는 정치 주체가 다양하다고 본다.

2. 법치주의의 유형 이해

정답 해설: 법치주의의 유형 중 A는 형식적 법치주의, B는 실질적 법치주의이다. ① 형식적 법치주의는 행정 작용뿐 아니라 사법 작용도 법률에 구속되어야 한다고 본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 ② 실질적 법치주의는 의회에서 제정한 법률로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본다.
- ③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 모두 국가 권력 행사 시 반드시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고 본다.
- ④ 실질적 법치주의는 법률의 내용이 헌법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심사할 수 있는 위헌 법률 심사제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 ⑤ 실질적 법치주의는 법의 목적과 내용도 정의에 부합해야 기본권의 실질적 보장이 가능해진다고 보므로 입법자의 자의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장을 한다. 형식적 법치주의는 법률의 실체적 내용이 아닌 통치의 합법성만을 강조해 입법자에 의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침해될 가능성에 간과한다.

3.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 이해

정답 해설: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 중 A는 복지 국가의 원리이다. ③ 복지 국가의 원리는 국가에 사회 보장 · 사회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는 근거가

되는 원리이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 ① 평화 통일 지향은 남북 분단 상황을 전제로 한 우리나라 헌법 특유의 원리이다.
- ② 복지 국가의 원리는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 보장을 위해 국가가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원리이다.
- ④ 문화 국가의 원리는 국가가 문화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전통문화의 계승 ·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원리이다.
- ⑤ 국제 평화주의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우리나라 국민과 외국인의 지위를 동등하게 보장하는 근거가 되는 원리이다.

4. 기본권 유형에 대한 이해

정답 해설: 기본권 유형 중 A는 자유권이다. ① 자유권은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성격을 가진 권리이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 ② 사회권은 실질적 평등의 실현을 위한 적극적 권리이다.
- ③ 평등권은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적 대우를 받지 않을 권리이다.
- ④ 참정권은 국가의 정치적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능동적 권리이다.
- ⑤ 자유권은 기본권 제한의 요건과 한계를 준수하면 법률로 제한될 수 있는 권리이다.

5. 전형적인 정부 형태의 특징 이해

정답 해설: 제시된 자료를 토대로 한 정당별 의석수는 표와 같다.

구분	A당	B당	C당
t 시기	70석	110석	20석
t+1 시기	60석	90석	50석
t+2 시기	80석	110석	10석
t+3 시기	101석	66석	33석

⑤ t~t+3 시기 중 정부 형태가 3회 변경되었다면, t+3 시기에 정부 형태는 의원 내각제이다. t+3 시기에 A당은 과반 의석을 차지하였으므로 단독으로 내각을 구성하였다 것이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 ① t 시기와 t+1 시기의 정부 형태가 서로 다르다면, t 시기는 대통령제이므로 t+1 시기는 의원 내각제이다. 의원 내각제에서 의회 의원은 각료를 겸직할 수 있다.
- ② t 시기는 대통령제이다. 대통령제에서 행정부 수반은 법률안 제출권을 가지지 않는다.
- ③ t+3 시기의 정부 형태와 행정부 수반 소속 정당이 t+2 시기와 같다면, t+2 시기와 t+3 시기 정부 형태는 모두 대통령제이다. 두 시기 모두 과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이

있으므로 $t+2$ 시기, $t+3$ 시기에 모두 야당 의석수가 여당보다 많다고 판단할 수 없다.
④ 대통령제에서 행정부 수반은 법률안 거부권을 가진다. $t+1$ 시기와 $t+2$ 시기 모두 대통령제이면 $t \sim t+3$ 시기 중 정부 형태가 2회 변경될 수 없다.

6. 특수 불법 행위 이해

정답 해설: ③ 병은 무가 주문한 도시락 30개를 약속한 시간에 배달해 주었다. 따라서 병은 정의 선임 및 사무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더라도 무에 대해 정의 사용자로서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 ① 을이 안전망 설치 등 보존상 하자로 인한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하지 않아 병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을이 공작물 점유자로서 병에 대해 1차적 책임을 진다.
- ② 손해에 대한 배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 배상이 원칙이다.
- ④ 법원 판결에 따라 정에 대해 불법 행위 책임이 인정되었으므로 정에게 책임 능력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의 법정 대리인은 병에 대해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인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을 지지 않는다.
- ⑤ 무가 병에게 명예 회복을 위한 적당한 처분을 하였더라도 무는 명예 훼손으로 인해 병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7. 국제 연합의 주요 기관 이해

정답 해설: 국제 연합의 주요 기관 중 A는 총회, B는 국제 사법 재판소, C는 안전 보장 이사회이다.

- ㄴ. 안전 보장 이사회에서 절차 사항이 아닌 실질 사항은 상임 이사국 전체의 동의 투표를 포함한 9개국 이상의 찬성 투표로 결정된다.
- ㄹ. 국제 관습법은 국제 사법 재판소의 재판 준거로 활용될 수 있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 ㄱ. 국제 사법 재판소에 제소된 사건의 당사자에는 국가와 달리 개인은 포함되지 않는다.
- ㄷ. 총회와 안전 보장 이사회는 모두 국제 사법 재판소의 재판관 선출 권한을 갖는다.

8. 미성년자의 계약 이해

정답 해설: ② 갑은 병과의 ○○ 운동화 매매 계약 체결 당시 병이 미성년자임을 몰랐으므로 ○○ 운동화 매매 계약 체결의 의사 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 ① 갑과 을이 체결한 계약은 사회 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므로 무효이다.
- ③ A가 갑과 병의 ○○ 운동화 매매 계약을 취소하면, 갑은 병에게 ○○ 운동화 모조 품 인도에 대하여 채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 ④ A는 병이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한 병과 정의 ○○ 운동화 증여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⑤ 미성년자라도 권리만을 얻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다. 따라서

병은 확답을 촉구할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9. 죄형 법정주의 원칙 이해

정답 해설: A는 명확성의 원칙, B는 적정성의 원칙이다. ④ 적정성의 원칙은 의회에서 제정된 법률에 의해 범죄와 형벌이 규정된 것에 그치지 않고 범죄와 형벌 사이에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 ① 관습법으로는 범죄와 형벌을 정할 수 없다는 원칙은 관습 형법 금지의 원칙이다.
- ② 적용할 형벌 규정이 없는 경우 법관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유사한 규정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다는 원칙은 유추 해석 금지의 원칙이다.
- ③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 법률에 의하여야 한다는 원칙은 소급효 금지의 원칙이다.
- ⑤ 적정성의 원칙은 현대적 의미의 죄형 법정주의에서 파생된 원칙이다.

10. 정치 참여 집단에 대한 이해

정답 해설: 정치 참여 집단 중 A는 정당, B는 이익 집단, C는 시민 단체이다. ④ 이익 집단과 달리 정당은 자신들의 활동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진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 ① 우리나라에서 법률안을 발의하는 주체는 국회, 정부이다.
- ② 정당은 공직 선거에 후보자를 공천한다.
- ③ 정당, 이익 집단, 시민 단체는 모두 정치 사회화 기능을 수행한다.
- ⑤ 이익 집단, 시민 단체는 정책 결정 기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11. 국제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과 국제법의 법원(法源) 이해

정답 해설: A는 자유주의, B는 현실주의이다. ② 현실주의적 관점은 국가 간 힘의 균형이 이루어질 때 국제 분쟁 발생 가능성이 낮다고 본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 ① 자유주의적 관점은 특정 국가의 침략 행위에 모든 국가들이 공동으로 대응함으로써 국제 분쟁이 해결될 수 있다고 본다.
- ③ 현실주의적 관점은 국제 사회의 무정부성을 전제하며 국가를 국제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행위자로 간주한다.
- ④ 국가와 국제기구는 모두 조약의 체결 당사자가 될 수 있다.
- ⑤ 조약은 원칙적으로 체결 당사자 간에만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

12. 민법의 기본 원칙 이해

정답 해설: 민법의 기본 원칙 중 A는 소유권 절대의 원칙이다. ① 소유권 절대의 원칙은 개인의 사유 재산권을 국가나 다른 개인이 침해하거나 제한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 ② 과실 책임의 원칙에 대한 내용이다.
- ③ 계약 자유의 원칙에 대한 내용이다.
- ④ 계약 공정의 원칙에 대한 내용이다.
- ⑤ 무과실 책임의 원칙에 대한 내용이다.

13. 우리나라의 지방 자치 이해

정답 해설: A는 지방 자치 단체의 장, B는 지방 의회, (가)는 주민 소환, (나)는 주민 투표이다. ㄴ. 주민 소환과 주민 투표 제도는 모두 지방 자치의 민주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ㄹ. 지방 의회는 지방 자치 단체의 장이 편성한 지방 자치 단체의 예산안에 대한 심의 · 확정권을 가진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 ㄱ. 조례의 제정과 개정 · 폐지 청구 제도를 통해 주민은 지방 의회에 조례의 제정과 개정 · 폐지를 청구할 수 있다.
- ㄷ. 지방 의회가 의결한 조례의 시행을 위해서 주민 투표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

14. 가족 관계 이해

정답 해설: ② B는 행위 능력이 있는 성년이므로 을은 B가 병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을 관리하지 못한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 ① 을이 A를 입양하지 않았으므로 A의 친권자를 갑과 을이 협의할 수는 없다.
- ③ B가 양자로 입양된 때에 갑은 B와 친족이며, 을은 갑의 친생자인 A와 친족이다.
- ④ B는 성인이므로 일반 입양되었으며, 양자로 입양된 때에 병은 B와 친족이고, C는 B와 친족이다.
- ⑤ 갑의 사망 당시 A와 C는 갑의 상속인이고, 양자인 B도 갑의 상속인이다.

15. 선거 결과 분석

정답 해설: 제시된 자료를 토대로 한 최근 의회 의원 선거 결과는 표와 같다.

구분		A당	B당	C당	D당
현행	지역구 의석	38석	90석	52석	20석
	비례 대표 의석	22석	130석	28석	20석
	총 의석	60석	220석	80석	40석

- ㄱ. <1안>의 경우 지역구 의원 선출 방식으로 절대다수 대표제를 채택하였다. 따라서 1차 투표의 최다 득표자가 2차 투표에서 낙선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 ㄴ. <1안>과 달리 현행 지역구 의원 선거에서는 하나의 선거구에서 2명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중 · 대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다. 동일 선거구 내 당선자 간 득표율 차이로

표의 등가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선거구제는 중·대선거구제이다.

- ㄷ. 현행에서는 의회 전체 의석수의 과반인 220석을 차지한 정당인 B당이 존재한다. 하지만 <2안> 적용 시 의회 제1당은 200석을 차지한 B당이 된다. 따라서 전체 의석 수의 과반을 차지한 정당이 존재하지 않는다. 정답 ⑤

16. 우리나라 헌법 기관의 이해

정답 해설: 우리나라 헌법 기관 중 A는 헌법 재판소, B는 대법원, C는 국무총리, D는 국회, E는 대통령, F는 국무 위원이다. ⑤ 대통령이 일반 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 ① 대통령 선거의 효력을 다투는 선거 소송 사건의 최종심은 대법원에서 관할한다.
- ② 국회는 대법관 임명 동의권을 가진다.
- ③ 탄핵 소추는 국회의 권한이다.
- ④ 국회는 국무 위원에 대한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17. 형사 절차 이해

정답 해설: ③ 병은 13세로 형사 미성년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소년법상 보호 처분의 대상은 될 수 있으나, 기소 유예 처분의 대상은 될 수 없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 ① 갑은 수사 단계뿐만 아니라 재판에 출석하여서도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② 검사가 피의자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하면 판사는 피의자를 직접 대면하여 심문한 후 구속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 ④ 정은 1심 법원에서 징역을 선고받고 구속되었지만 판결이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된다.
- ⑤ 정에게 선고된 형이 확정되면 정은 노역에 복무해야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가석방 제도를 통해 석방될 수 있다.

18. 형사 절차 이해

정답 해설: ㄱ. A는 형사 사건의 피해자로 갑에 대한 유죄가 확정되더라도 형사 보상 제도를 통해서는 자신의 피해를 보상받을 수 없다. 형사 보상 제도는 피의자로서 미결 구금된 사람이 무죄 취지의 불기소 처분을 받거나 사법 경찰관으로부터 무죄 취지로 불송치 결정을 받은 경우, 피고인으로서 미결 구금되었던 사람에 대한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판결이 확정되어 형의 집행을 받거나 받았던 사람이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국가에 구금에 대한 물질적·정신적 피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이다.

- ㄷ. 정당방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긴급 피난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

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한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 ㄴ. 형사 소송의 당사자는 검사와 피고인이다. B는 형사 사건의 피해자이다.

19. 근로자의 권리 이해

정답 해설: 갑과 을은 근로 계약 체결 시 취직 인허증이 요구되지 않으므로 15세 이상인 자이다. 갑은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 관계 기록 사항에 관한 증명서가 요구되지 않으므로 18세 이상 근로자, 을은 18세 미만인 연소자이다. ⑤ □□ 지방 노동 위원회는 갑의 부당 해고 구제 신청은 인용하였으나, 갑의 부당 노동 행위 구제 신청은 기각하였다. 즉, □□ 지방 노동 위원회는 갑에 대한 해고는 부당하나 갑의 근로 3권을 침해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 ① 병은 연소자인 을에 대하여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 ② 병이 을의 근로 시간을 매 근무일 17시까지 1시간씩 연장하는 것은 을과의 합의가 있으면 근로 기준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 ③ 근로 계약 내용에 따르면 일요일은 갑과 을의 근무일이므로 근로 기준법상 휴일 근로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갑과 을이 근로 계약 내용대로 근무한다면 갑과 을의 일요일 근무에 대해 병이 지급해야 할 1일 임금은 각각 84,000원이다.
- ④ 노동 위원회의 구제 절차와 별도로 갑은 병을 상대로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해고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20. 법원과 헌법 재판소의 권한 이해

정답 해설: A는 위헌 법률 심판, B는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 심판이다. ④ 위헌 법률 심판은 구체적 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될 것을 요구한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 ① 위헌 법률 심판은 소송 당사자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법원이 직권으로 제청할 수 있다.
- ② □□ 행정 법원이 제정한 A는 소년부 법원에서 불처분 결정된 사건의 수사 경력 자료의 삭제 및 보존 기간을 규정하지 않은 ○○법 조항을 심판 대상으로 하였다.
- ③ 을이 청구한 B는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 심판이다.
- ⑤ 헌법 재판소는 ○○법 조항과 △△법 조항이 헌법상 과잉 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고 판단하였다.